어떤 교육제도

이 은 옥
(看護學博士 : 서울의대 간호학과 교수)

어떤 정책이나 제도이든 장단점이 없는 것이 없다. 그 가장 장점이 크고 단점이 적은 것을 택해야 하며 어떤 확고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이는 또한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거시적으로, 넓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몇가지 제시하고저 하는 제도적 개선은 다음과 같다.

1. 체계적 교육제도 확립

간호교육은 정기교육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4년제 대학과정으로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간호보조원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잠정조치와 영구조치에 대해 언급하고저 한다.

a. 간호보조원 교육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1) 개인적으로 중학교 졸업한 간호보조원은 계속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고 고등학교 졸업한 간호보조원은 서울에서만 야간 간호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2) 사설학원에서의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 3) 경력을 쌓은 간호보조원이 간호원의 위치에 대치될 우려가 있다.

기성 간호보조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방에도 야간 간호전문대학을 개설해야 한다.

앞으로 간호보조원 교육은 정규교육체제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인문고등학교 직업반 중 간호보조반을 편성하여 고등학교내에서 교육시키거나 간호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지원자를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b. 간호전문대학 교육

문제점으로는 1) 제도상으로는 개인적인 계속교육의 기회가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기회가 없다. 2) 간호학문의 질을 높일 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3) 충분한 시설과 자원을 구비한 효과적인 교육실시에 제한점이 많다.

기성 간호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1) 서울과 지방의 능력 있는 대학교에서 개방대학 과정을 설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관련학문 분야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수료 받도록해야 한다. 2) 전문대학 과정이 모두 4년제 대학과정으로 흡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방송통신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여 전문대학졸업자에게 학사학위 과정을 밟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4년제 대학과정으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이는 오롯지기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간호 전문대학은 인근지역의 국립대학교나 사립대

학교의 4년제 program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당면한 공립전문대학의 문제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우리의 장기목표를 한발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될 때까지 잠정적인 방법이면서 현재의 시설과 자원의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거국적으로 전문대학을 종합전문대학으로 만들고 계열별 단과대학을 구성하며 간호대학도 그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2.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① 간호인력 수급정책상의 문제

간호인력의 수요와 공급은 보사부와 문교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는 1)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의 업무규정이 막연하고 2) 간호보조원의 과잉배출과 과잉활용 3) 간호원의 수요산출상의 문제와 강력한 인력활용대책의 결여로 간호원이 과소공급(의료법 기준에 30~60%충원)되고 있고 4) 간호인력의 도시·농촌 분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 의료법의 기준과 충원권장비율을 고려하여 앞으로 더 필요한 간호원의 수를 산출할때 25,000명에 달하며 이는 간호원 : 인구를 1 : 1000으로 계산했을 때의 부족수와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② 교육제도와 시설의 상호의존

지역사회 요구와 간호전문직으로써의 요구에 적합한 간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간호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간호인력의 훈련 과정에서 보사부의 통제를 받는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이상의 간호인력의 수요공급, 교육제도 및 교육시설등의 문제가 문교부와 보사부가 상호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여 의견교환하며 그러한 근거하에 정책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전체적인 문제점의 파악과 해결 보다는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견지에서 해결내지는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런 고로 양 부처의 기획담당자와 협회와 학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정책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나 정부가 준비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보다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간호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간호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간호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 없이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고로 문교부내에 간호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입안자와 간호교육 전문가 간의 의견교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입수하여 간호교육전문가 개개인의 의견이 아닌, 간호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4. 면허제도의 변화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간호원 면허제도의 일원화도 자연히 뒤따르게 될 것이다.